



한국의 經濟奇蹟은 끝난 것인가?

南 宗 鉉 (연구자문위원, 고려대 교수)

年前 미국 MIT 대학의 Paul Krugman 교수는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혹평하여 우리를 매우 당혹케 한 바 있다. 그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가보다는 주로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증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은 머지 않아 하나의 신화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뜻에서 그는 동아시아 경제를 종이호랑이라 불렀으며 국내저축 동원에 정부개입이 심하였던 싱가포르를 옛 러시아 경제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이들 국가들이 이룩한 경제기적은 Krugman이 제시한 요인과는 전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붕괴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은 끝난 것일까?

먼저 Krugman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난 30여년간 가히 기적적이라 할만큼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여온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성장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요인중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대외지향적 정책기조하에서 발생한 성장의 善循環을 들 수 있다. 즉, 대외개방으로 얻어진 무역의 확대는 고용증대와 투자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증대는 다시 저축증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높은 교육열로 인한 인적자본의 확대는 외부경제효과를 발휘하여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단위수출의 고용창출효과가 단위수입의 고용손실효과보다 두배나 높았다. 따라서 급속한 무역의 확대는 고용증대와 실업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의 확대는 소득증대를 통해서 그리고 평균보다 높은 수출소득의 한계저축율에 의해서 국내저축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

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국내저축율 (GDP에 대한 비율)은 1965년 8%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에는 25%로, 그리고 1995년에는 36%까지 상승하여 높은 수준의 국내투자를 가능케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역확대에 의한 경제적 果實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 무역 확대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수출의 對 GDP 비율은 80년대 후반 5년 동안은 연평균 38%에 달하였으나 90년대 상반기에는 3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한국에서의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였음을 뜻한다. 또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무역확대에 따른 순고용창출효과도 이미 8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소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수출도 수입만큼 자본집약적 상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저축율도 1988년에 39%를 기록한 후 하향추세로 반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경제가 앞으로도 과거에 경험하였던 것과 같은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Krugman이 제시한 동아시아 경제의 몰락 시나리오를 액면 그대로 믿을 만한 이유도 거의 없다. 과거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이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증대에 크게 의존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이들 국가들의 성장패턴을 보면 요소중심에서 생산성중심으로 점차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도 점차 생산요소의 양적 증대효과보다는 생산성 향상효과로 전환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R & D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활동도 급격히 상승하여 거의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비록 국내저축율이 80년대 후반이후 감소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3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또 그 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자본축적비율이 아직도 미국과 일본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생산기술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한국경제는 앞으로 적어도 20년간은 6%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를 보면 그것이 쉽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은 최근의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이미 한국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어 왔다. 예컨대, 세계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980-95년 동안 대만은 한국보다 연평균 10% 포인트나 낮은 투자율 (GDP에 대한 비율)로 한국과 비슷한 성장률을 실현시켜왔고, 또 한국보다 훨씬 더 낮은 국내저축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계속 무역흑자를 쌓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만큼 한국에서의 투자활동이 대만에서보다 비능률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외국의 직접투자자들이 한국을 투자 부적합지로 판정하고 투자를 외면해 온지 이미 오래되었고 심지어 한국기업들도 골치 아픈 국내투자 보다는 해외투자를 더 선호하게 되는 추세가 아니었던가? 만약 이번 IMF 시대를 맞아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死藏시키고, 선진국진입의 문턱에서 탈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바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어떤 개혁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먼저 개방경제체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개방된 선진국에 가면 치열한 경

쟁에 의해서 물건값이 쌀 뿐 아니라 가격 및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통제나 개입이 대부분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방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협소한 국내시장의 불리를 자동적으로 제거하여 독과점 시장구조가 발 붙일 틈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 들릴지 모르나 한국은 80년대 초 모든 수출지원책을 철폐하면서 국내시장에 대한 보호는 어느 정도 유지하였던 것이 기업가들로 하여금 수출보다는 국내시장판매를 선호케 하였고, 그것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간 수출비율을 하락시켜온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외개방은 상품시장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시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시장도 좀 더 일찍 엄격한 감독하에서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실패위험은 크게 감소하였을 것이다. 보호체제하에서 정부가 모든 실패위험을 떠안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이미 80년대 초 외채와 무역적자가 규모면에서(GDP 對比) 볼때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호강화보다는 개방확대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갔고 그것이 80년대 후반 고도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의 개입주의와 보호주의는 항상 고개를 들게 되기 마련이고 그것은 결국 경제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

둘째, 개방경제체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상 충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한국에서와 같이 높은 물류비용은 어떠한 경제상황하에서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과거 국제무역의 확대와 그 경제적 과실이 교통, 통신, 정보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히 발달된 국가에 대부분 귀착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는 내핍을 권장하더라도 국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필요한 만큼 오히려 늘려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법과 제도를 시장기능의 적합성과 국제적 규범에 비추어 보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필요한 것은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한 때 유연성과 효율적 경영관리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이른 바 재벌도, 변화된 경제상황에서는 유연성이 결여된 비능률적인 기업집단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같은 법과 제도, 그리고 주어진 정치풍토하에서는 재벌이라는 한국 고유의 기업운영방식이 기업가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결과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호지급보증의 점진적 철폐와 결합채무제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재벌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성공한 기업가가 사회적으로 비능률적인 재벌형태의 기업경영관리 방식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모든 주변정책들이 개혁 내지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겐 금융개혁을 포함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기업의 인수 및 합병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그리고 상속세법과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사실 정부는 모든 산업 및 기업에 대해서 그 소유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하나의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할 뿐 재벌정책이 새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적절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부패하기 쉬운 관료조직과 정치권의 개혁없이 정부가 재벌총수를 상대로 총수의自省과 아랑에 의존해서 재벌문제를 풀어나갈 일을 더더욱 아니다.

끝으로, 한 나라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대두되는 장애물도 다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조정과 이에 따른 보완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정책조

정의 경제적 효과는 그 時宜性(timing)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금융 위기도 정책조정이 적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정책당국의 무지나 관료집단의 잘못된 집착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책조정의 결과로 혜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가는 짧게는 정부의 정치적 관리능력과 지도력에, 그리고 길게는 유능한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해안과 능력에 달려 있다. 항상 국가이익이 우선하여 적기에 필요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익집단간의 중재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또한 모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전개되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감시자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학사(1967)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경제학 박사
 (1975)
 미국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조교수(1975-77)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1977-81)
 세계은행(IBRD) Senior Economist(1985-87)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1981-현재)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1994-1996)
 미국 Stanford University 경제정책연구소 초빙
 연구원(1997)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1997-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1993-현재)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연구원 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후원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근거:
 - 법인회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
 - 개인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4호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551-3334/7 Fax: 551-3339
 E mail: IGENET@chollian.dacom.co.kr